

동아시아 지역협력 현황과 미래



2014년 12월 8일

김 용 덕
Kim, Yong Duk



Contents

I 동아시아 지역협력 개요

II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과정

III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미래



Chap. I

I 동아시아 지역협력 개요

II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과정

III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미래

1. 발전과정 : 어떻게 시작되었나?

1967 | ASEAN 설립

한중일/한중일+ASEAN
→ 체계적인 협력체제 미 구축

1997 | 'ASEAN+3'
지역협력체제 구축

1997 아시아외환위기 계기 출범
→ 1999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2005 | EAS 출범
(ASEAN + 3' + 인도, 호주, 뉴질랜드)

총 16개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성격

2006 | 환태평양파트너십(TPP) 출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가하여 12개국으로 확대

동아시아지역
무역협력

일방적/다자간
무역자유화 접근방식

양방 간/복수국가 간
자유무역/투자협정 형태로 발전

2. 필요성 : 왜 필요한가?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차원의 블록화 ▶

2) 외부충격에 대한 지역차원의 안전망 확충 ▶

3) 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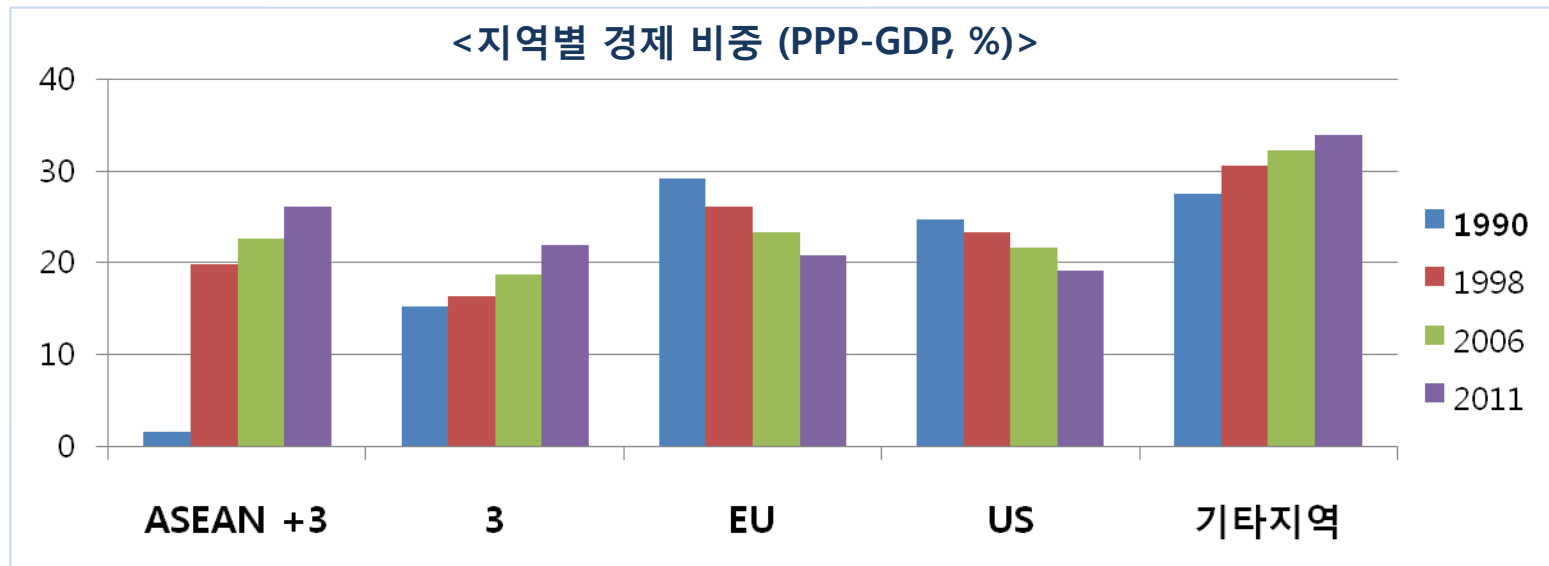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차원의 블록화

■ 세계경제 추세

- 1980년 이후 신 자유주의: 개방화, 자유화로 금융시장 통합 및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지역화, 블록화 : NAFTA, EU, 남미·중동·아프리카 지역공동체

- 동아시아 경제규모(2011년)는 전체의 26.2%(EU 20.8%, 미국 19.1%) 이나
→ 통합의 시너지를 누리지 못하여 거대경제권과의 경쟁에서 불리



<자료: IMF, WEO>

2) 외부충격에 대한 지역차원의 안전망 확충

■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화, 개방화로 주기적 반복적인 금융위기 발생

- 1997 ~ 아시아 외환위기
- 2008 ~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
- 2010 ~ 유럽 발 재정위기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는 막대한 자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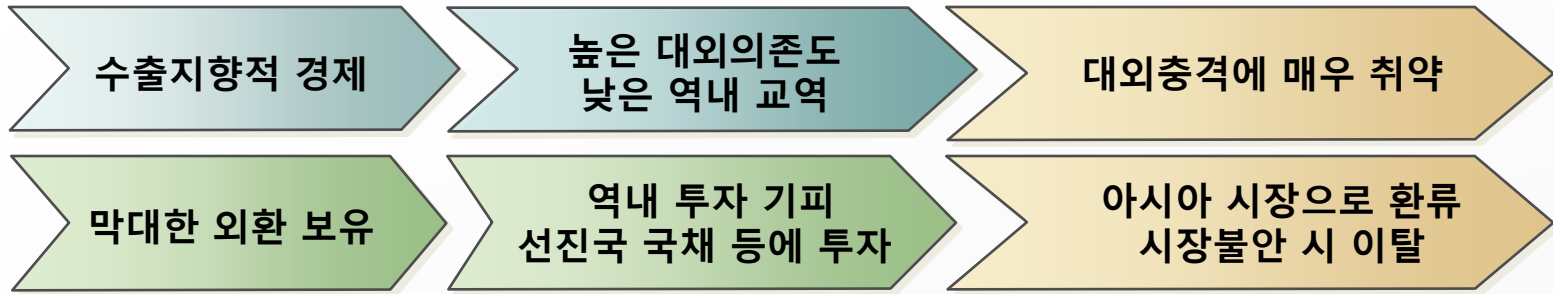
- 이번 유로위기 시 IMF, ECB, EFSF/ESM의 자금으로도 부족
→ IMF 자원 : 7.000 억 달러, EFSF/ESM 자원 : 7.000억 유로 등

■ 아시아지역도 자체 금융안전망 구축과 자원확보 필요

- 1997 외환위기 이후 ASEAN+한·중·일은 지역공동의 금융시스템 강화 노력
→ 2000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구축
- 2008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CMI다자화'(CMIM) 및 2012 규모확대 등 강화방안 합의
- 2011 독립된 거시경제모니터링 기구인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출범 및 2012 AMRO 국제기구화를 위한 조약안 합의

3) 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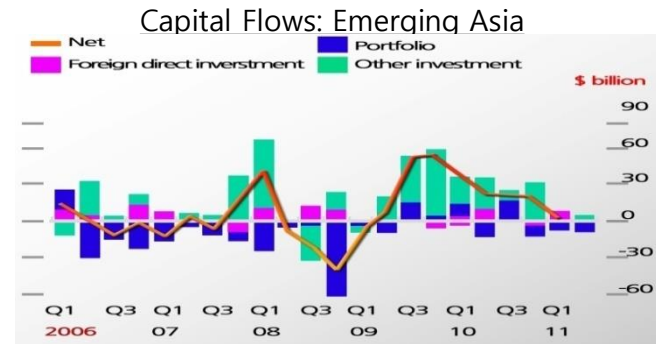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경제의 특징



경제3국의 역내 교역 비중

경제3국	2001년	2010년
ASEAN+ 3	33.8	34.1
NAFTA	55.7	48.7
EU	68.0	64.3

자료: 한국무역협회



Source: Computed from CEI(Aug. 2011)

■ 아시아 역내 교역증진 + 지역자금 아시아 역내에서 활용방안 마련

- ➔ 역내성장 증진 및 세계경제 발전 기여
- ➔ 아시아 개발재원 확보 및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에 기여

<참고> NAFTA, EU의 사례

NAFTA 이후

GDP 성장률 : (80~93) 평균 2.5% → (94~00) 3.2%

외국인직접투자 : (80~93) 연평균 407억불 → (94~00) 1,728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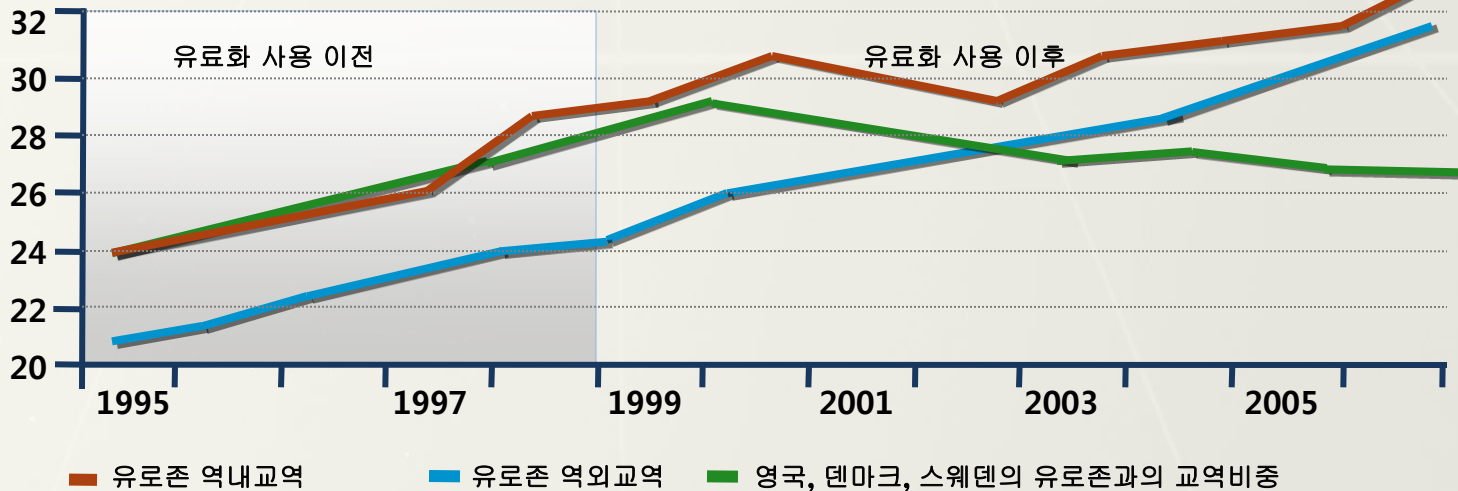
멕시코 수출증가 : OECD 평균을 크게 상회

EU 출범 이후

경상 GDP : 99년 6.3조 → 08년 9.3조 유로

대외거래(역내) : 99년 1.6조(0.9조) → 06년 2.8조(1.4조) 유로

유로지역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 (단위: GDP 대비 수출입 총합 비중, %)





Chap. II

I 동아시아 지역협력 개요

II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과정

III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미래

II. 동아시아 지역협력, 어떻게 발전해왔나?

금융협력



치앙마이이니셔티브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경제동향/정책협의 강화

- AMRO 출범

역내 적정 환율제도

통상협력



한중일 중심   

- 한중일 FTA/한일 FTA/한중 FTA

환태평양 차원

- TPP

- RCEP

II-1 금융협력 1. 정책협약의 체제

■ 아시아 통화기금 (AMF) 설립논의

- 1997. 9 일본이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제안(일본이 ½ 부담)
 - ✓ 엔화의 저 평가가 아시아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전략
- IMF 기능과 중복, 위기국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 → 미국 · IMF 반대로 무산

■ 마닐라프레임워크 그룹(MFG : Manila Framework Group)

- 1997. 11월 AMF 설립대신 IMF신용제도확충, 지역차원의 경제감시체제를 도입하는 안을 미국이 제안, 14개국으로 구성
- 비역내국가인 미국,캐나다 등의 참여로 공감대 부족, 2001년 이후 사실상 폐지
- ❖ 1997년 IMF의 '보완신용제도'(SRF) 신설에 기여

II-1 금융협력 1. 정책협의의 체제

■ ASEAN + 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 1997. 12月 'ASEAN+ 3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설치 결정
- 1999. 3月 베트남에서 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 1999. 4月 마닐라 ADB 연차총회 시 'ASEAN+3 재무장관 회의' 출범
- 1999. 12月 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포괄적인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 한·중·일 재무 국제국장회의

- 1999. 8月 한국(제주)에서 '제1차 한·중·일 3국 국제국장회의' 개최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탄생의 모체 역할
- 2000. 2月 일본(벵푸)에서 '제2차 한·중·일 3국 국제국장회의' 개최
'중앙은행간 스왑협정'(Bilateral Swap Arrangement, BSA) 추진 합의

2. 금융협력 현황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역할 : ASEAN+3 역내 국가간 위기 시 유동성지원 장치

■ 체제

- ①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10+3' 양자간 통화스왑협정(BSA : Bilateral Swap Arrangement)
- ② 회원국간 경제정책 검토와 정책협의(ERPD : Economic Review & Policy Dialogue)

■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 출범

- 1999. 8월 제주에서 1차 한중일 국제국장회의 개최(한국제안)
- 2000. 2월 베트남 2차 3국 국장회의에서 한중일 및 ASEAN 간 스왑협정 추진 합의(한국제안)
- 2000. 5월 ASEAN+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시 발표, CMI 출범
 - ✓ 2000. 11월 북경 재무차관회의, CMI 기본구조, 기본원칙 등 구체적 메커니즘 합의
- 2001. 7월 한일간 최초 양자간 협정체결, 05. 9월까지 총 395억불 체결

■ CMIM(다자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으로 전환 및 규모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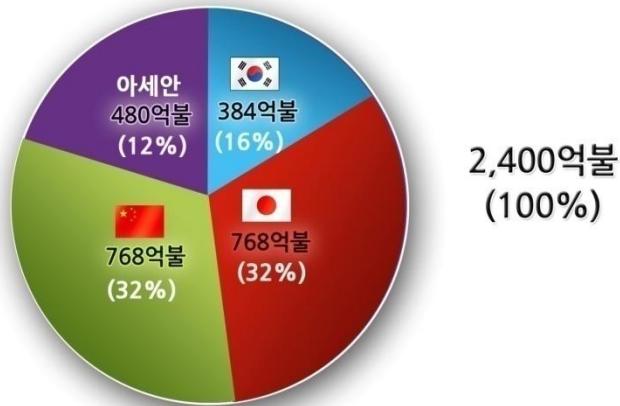
- 2007. 5월 양자간 통화스왑인 CMI를 다자간 계약인 CMIM으로 전환 합의
- 2008. 5월 총 규모 증액(400억불 → 800억불) 및 한중일과 ASEAN간 분담비율(8:2) 합의
- 2009. 2월 CMIM 규모 확대(800억불 → 1,200억불)
- 2010. 3월 24일 CMIM 협정 발효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CMIM 효과성 제고 : 유로존 위기를 계기로, 2012. 5月 CMIM 강화방안 합의

① 규모 2배 확대 : 기금규모 최종 2,400억불로 확대(이전 1,200억불)

<회원국 별 분담금 규모>



●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

한국 : 1.0 중국 : 0.5 일본 : 0.5
아세안 (Big5) 2.5 ; (Small5) 5.0

② 위기에방프로그램 도입

- 독자적인 위기에방프로그램인 'CMIM 예방적 지원제도' (CMIM Precautionary Line : CMIM-PL) 도입
- 기존 위기해결기능은 'CMIM 안정화 지원제도'(CMIM Stability Facility : CMIM-SF)로 명칭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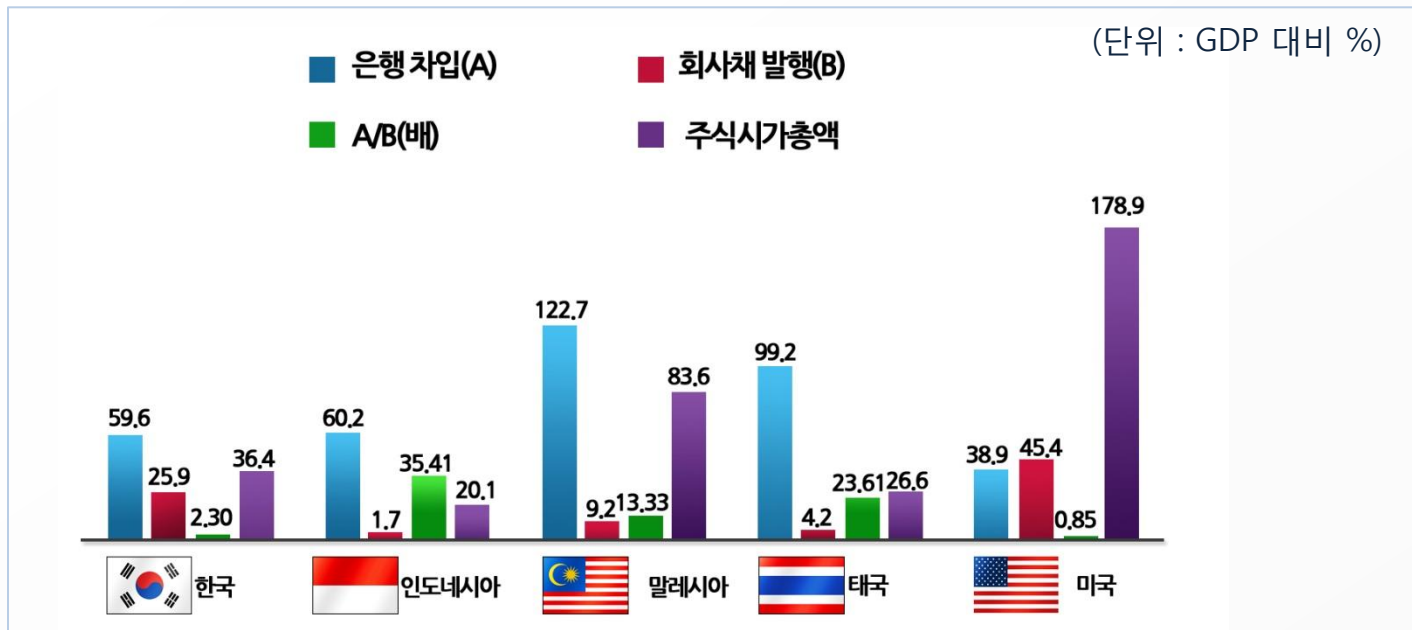
③ IMF 비 연계비중 20%에서 30%로 상향조정, 2014년 이후 40%까지 확대 합의

2)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 Asia Bond Markets Initiative)

■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필요성

- 채권시장 미발달 → 자금조달 시 간접금융시장에 의존 → 만기불일치, 통화불일치 초래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조달 형태(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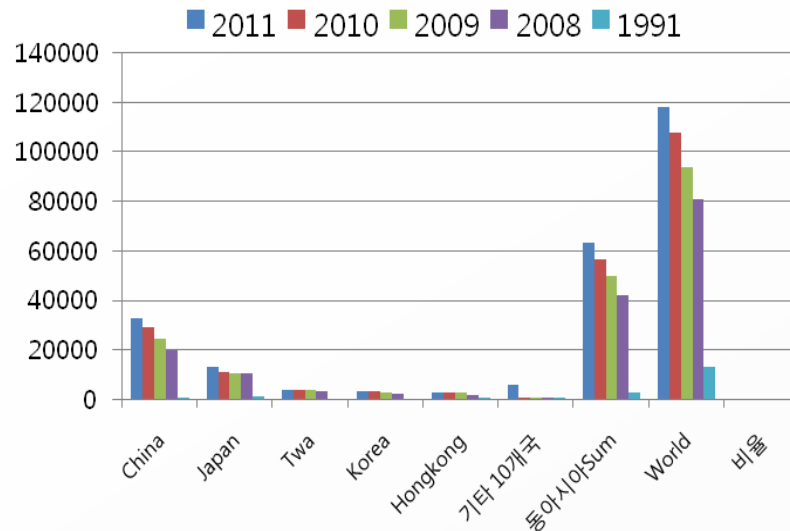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 만기불일치 :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단기차입 자금을 장기 투자자금에 활용
- 통화불일치 : 차입 시 자국의 통화가 아닌 대부분 달러화 표시 통화

2)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 Asia Bond Markets Initiative)

■ 외환보유고의 역내 활용

- 외환보유고 현황 : 2011.12월 동아시아 국가는 6조 3,314억 달러(세계외환보유고의 53.5%)



(억\$ 단위)	2011	2010	2009	2008	1991
China	32547	29137	24529	19660	482
Japan	12958	10961	10490	10308	806
Twa	3906	3872	3530	2964	0
Korea	3069	2921	2704	2015	138
Hongkong	2854	2687	2558	1825	289
기타 10개국	5539	485	391	430	459
동아시아Sum	63314	56750	49645	41951	2516
World	118316	107909	94105	80720	13081
비율	53.5	6	52.7	52	19.2

* World Bank 참조

- (현행) 외화자금은 뉴욕,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으로 유출 → 다시 아시아 시장으로 환류
 → 급격한 자금 이동 시 외환 및 금융시장을 교란
- (바람직)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통하여 역내에서 외화자금 공급 (선 순환구조)

2)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 Asia Bond Markets Initiative)

■ ABMI 출범

- 2003년 2월 한국이 논의를 제안하여 출범
- 2008년 일본은 'ABMI New Roadmap'을 제의
- 2011년 한국이 향후 10년간 아시아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New Roadmap+'를 제안

< New Roadmap+ 3개 기본방향 및 우선 추진과제 >

기본방향 1

- 가시적 성과물 도출을 위해 추진할 기존 이슈

- ① CGIF 신용보증 성과
- ② 인프라 파이낸싱
- ③ 역내 기관투자자 육성
- ④ ABMF 과제 활성화
- ⑤ RSI 설립 가속화

+

기본방향 2

- ABMI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추가 과제

- ① 국채시장 발전방안
- ② SME, 소비자금융 발전
- ③ 역내 신용평가사 협력 및 역량제고

+

기본방향 3

-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규 과제

- ① 금융시장 이해도 제고

■ 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CGIF): 11. 11월 운영개시, 13. 4월 최초 보증성과

■ 역내증권결제기구(RSI): 역내증권거래 시 통합예탁결제기능 담당기구
(설립논의 중)

3)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협의(ERPD)

■ 회원국간 경제상황의 상호감시와 평가를 통해 지역 경제동향, 금융시장상황을 검토 협의하는 시스템

- ASEAN+3 회의 시 회원국이 자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논의
- ❖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999. 11월 ASEAN+3 정상회의 한국제안)
- ❖ 외환 및 금융위기 조기경보장치(EWS: Early Warning System)운영(2000.3 AFDM 한국제안)

■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출범

- 2011년 싱가포르에서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출범
 - ❖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 감시와 필요한 정책 권고
 - ❖ 위기 발생시 CMIM에 의한 자금지원 요청, 인출 등 사무국업무 담당
- 2013년 재무장관회의(델리)에서 AMRO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조약안에 합의
 - ❖ 조약 발효 시, ASEAN+3 금융협력에서 국가 차원의 합의로 설립된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
 - ❖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

4) 역내 적정환율제도

■ 배경

- 역내국간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와 경직적 환율운동 → 아시아 외환위기 초래
- 주요 역외통화 뿐만 아니라 역내 각국통화 간의 안정적 환율유지가 긴요

■ 주요 논의 내용

공동통화 바스켓 제도

주요통화(달러, 유로, 엔)로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환율을 운용하되, 주요 통화간 가중치는 교역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안

AMS 제도

동아시아 지역통화의 가치척도가 되는 공통화폐 계산단위 (ACU: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환율을 운용하는 안

단일통화 제도

동아시아 단일통화를 창출하는 안

- 경제적 충격의 동질성과 보편성
- 자본, 노동,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
- 대외교역 비중이 크고 대외개방
- 생산다변화와 정책목표 일치

■ 단일통화 도입 전망

- 단일통화 사용을 위한 최적통화 여건이 미성숙하다는 의견이 우세
- ❖ 역내 무역자유화 촉진,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의 동질성 제고 등 제반 여건 조성 이후 추진 가능

II-2 통상협력

1

한 · 중 · 일 중심

- (1) 한 · 중 · 일 FTA
- (2) 한 · 일 FTA
- (3) 한 · 중 FTA



2

환태평양 차원

-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3

한국의 FTA추진 현황 및 계획



■ 한 · 중 · 일 FTA

- 2009 ~ 2011年 : 한 · 중 · 일 산관학 공동연구
- 2012. 5月 : 한 중 일 정상회의시 "연내 개시 협의 즉시 착수" 공동선언 발표
- 2012. 11月 : 6~9월 협상구조 등에 대한 실무회의 개최 후 11.20 협상개시 선언
- 2013 : 3월 제1차 협상(서울) 개최 후, 7월 2차(상해,) 11월 3차(도쿄) 협상 개최

- 한 · 일 FTA : 2003년부터 6차례 협상이 있었으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진전이 없는 상태
 - :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 내 제조업피해와 대일 무역역조 심화가 걸림돌

■ 한 · 중 FTA

- 2005년 부터 정부 간 사전 협의 추진(05~06년 민간공동연구; 07~10년 産官學 공동연구)
- 2012. 5月: 공청회, 대경장 의결 등 국내절차 완료 후, 한 · 중 FTA 협상개시 선언
- 2012 : 5월(1차), 7월(2차), 8월(3차), 10월(4차) 협상 진행
- 2013 : 4월(5차), 7월(6차), 9월(7차) 협상을 통해 모델리티 타결 후, 2단계 협상 진행 중

■ 한·중 FTA 필요성

- 한국 : 한중FTA체결 시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 기대
- 중국 : 한중FTA를 통해 한미 FTA, 한EU FTA와의 연계 효과 기대
- 미국 및 EU의 중국투자확대와 중국의 미국 및 EU 진출 투자 확대 등 간접적 FTA체결효과

■ 한·중 FTA 추진목표(한국측)

- 敏感 品目에 대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여 상호이익 극대화 도모
- 상품, 서비스, 투자, 規範, 비관세 장벽 등이 포함된 포괄적 FTA를 추구

■ 한·중 FTA 향후 계획

- 한국 정부는 한중FTA를 양국간 상호이익에 맞게 추진한다는 계획
→ 협상전략과 함께 취약부분 피해대책도 마련
- ❖ 다만, 한중 양국의 취약분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반대 등이 예상

■ 2006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亞太4개국간 체결한 상품협정인 FTA 형태로 발효

- 미국(2008),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확대(9개 회원국):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목표
- 2011 캐나다, 멕시코 참여, 일본 참여의사 표명(12개국으로 확대), 필리핀, 대만 등도 관심
 - ✓ 세계 GDP 및 교역 규모의 38% 및 26%를 차지
- TPP는 일각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 속에 중국포위용 지역협력체제로 발전 시각도 있음

■ 향후 일정 및 추진 현황

- 현재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규정 등 총 25개 분야 협상을 진행 중
 - ✓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지적권, 노동, 환경 등 21세기형 무역이슈도 포괄
- 2015년까지 협정국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목표, 현재 까지 총 17차 협상 진행(미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내 타결을 선언했으나, 사실 상 실현은 어려운 상황)

■ 한국의 입장

- 미국은 한국의 참여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타진
- 한국은 그간 TPP 회원국 중 7개국과 FTA를 체결 등을 들어 참여에 신중 검토 중이라는 입장
- 2013.12. 2: 정부 TPP에 대해 '관심표명'(기존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약'에 들어감을 의미)
 - ✓ TPP 협상참여절차: '관심표명' → 기존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약 → 공식 참여선언 → 기존참여국의 참여승인 → 공식 협상참여'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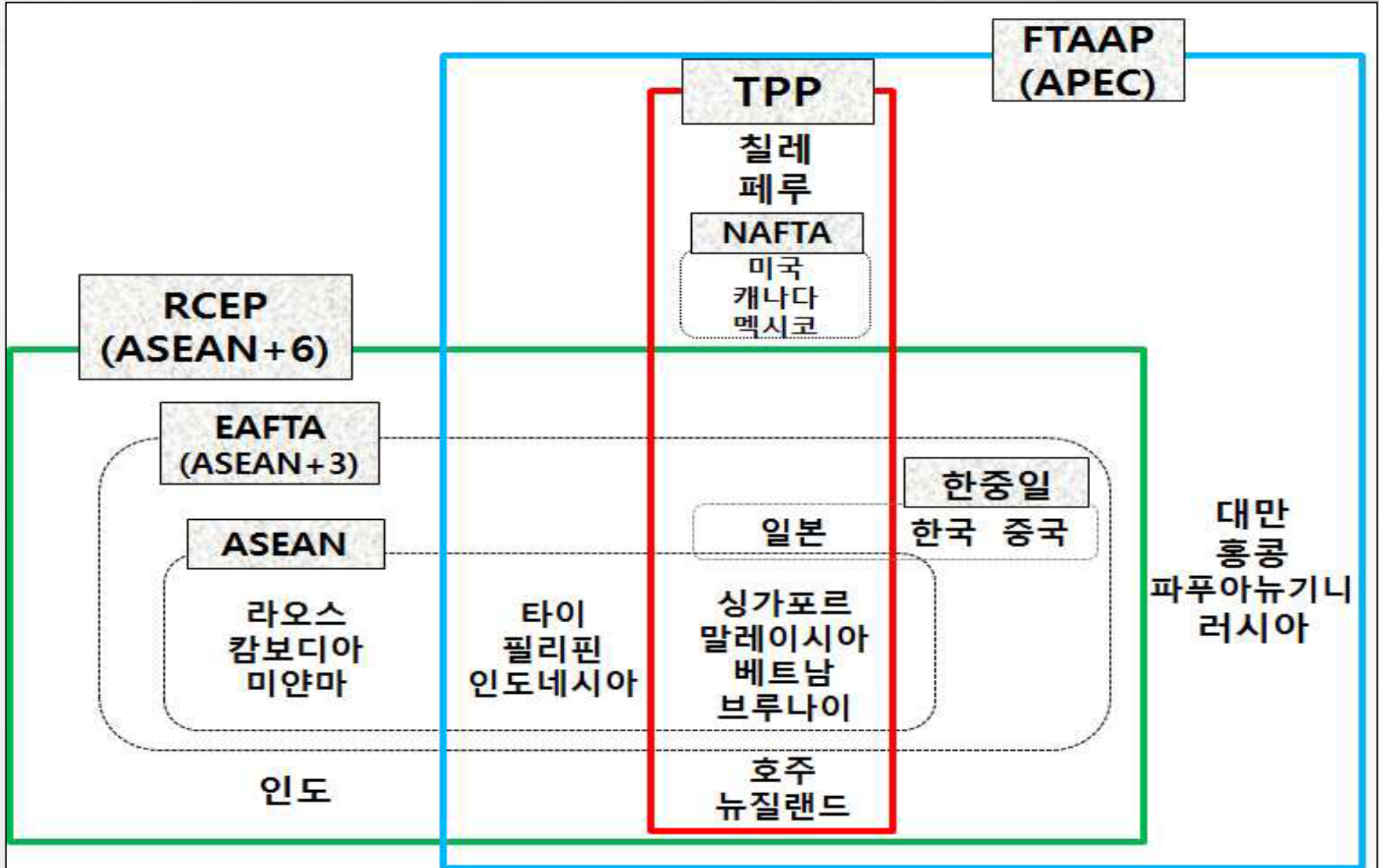
- ASEAN 중심의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정
- 2011. 11月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제안: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통합 주도에 대응
- 참가범위를 'ASEAN+3(한·중·일)', 'ASEAN+6(인도, 호주, 뉴질랜드 포함)'로 한정하지 않는 'ASEAN++FTA' 형태를 지향

■ 진행사항

- 2012년 4月 ASEAN 정상회의에서 작업반을 설립키로 하고 연내 협상개시 목표
- WTO 협정과의 合致性을 유지 하면서 포괄적이고 相互 互惠的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구
- 2013.5.9~13(부르나이) 제1차 공식협상이 우리나라를 포함 1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 ✓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RCEP무역협상위원회(TNC)활동,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향후 협상일정 등 논의
- 2015년 까지 협상타결 목표(타결 시 전세계 인구 50%, GDP 30% 차지)

- **한국의 입장** : 기본적으로 ASEAN+ 차원의 지역통합에 동의하는 입장이므로 RCEP에 대해서도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하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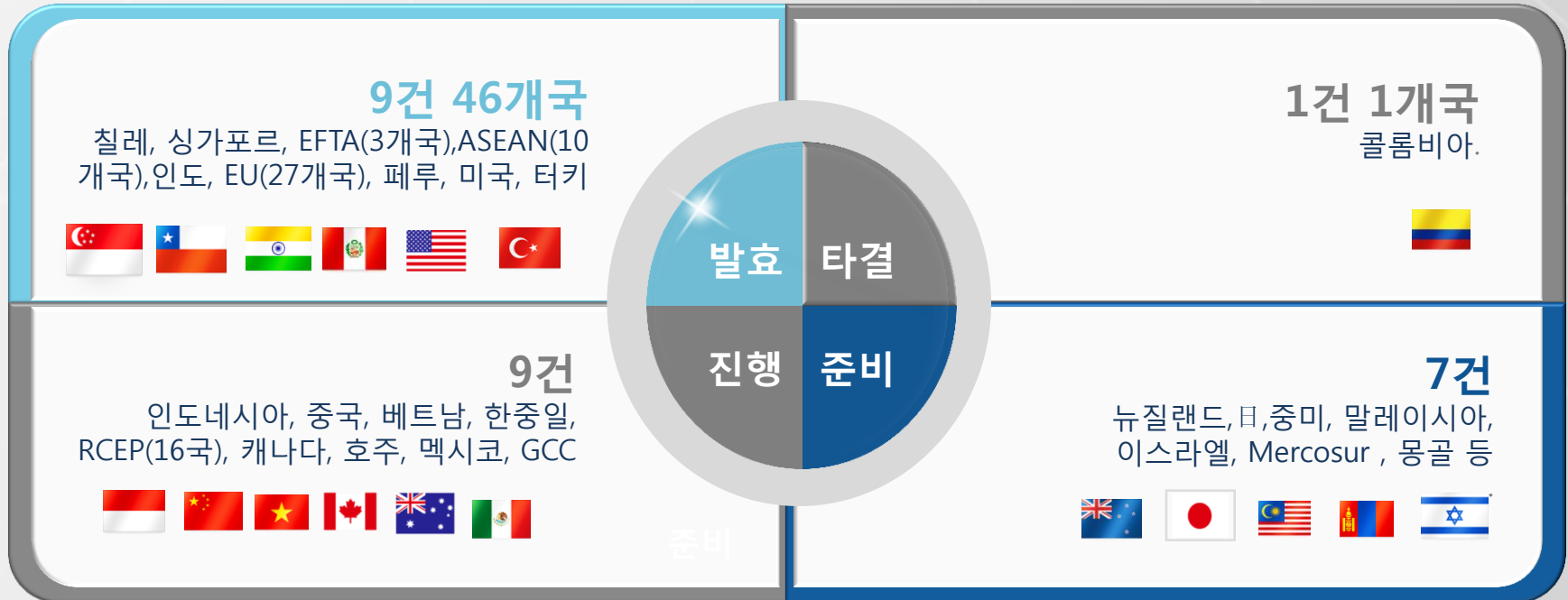
<참고>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



3.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한국의 FTA 진행상황

- 2003년 결정된 한국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로드맵(roadmap)에 따라 한·칠레 FTA 타결을 시작으로 총 9건 발효
- 1건이 타결되었고, 16건은 협상 진행 또는 사전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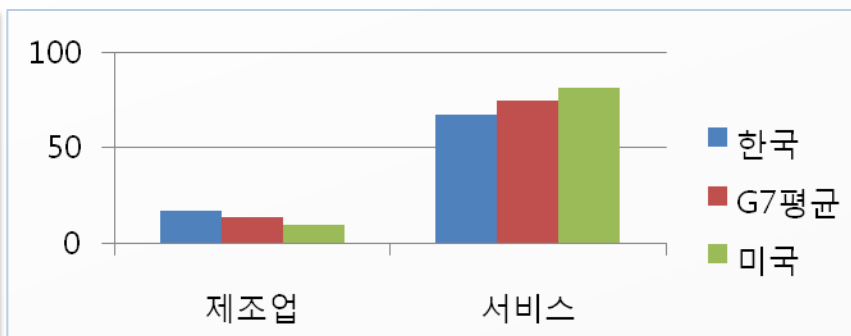
3.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자원 확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

■ 한국의 대외 의존도

	2009	2010	2011
수출	363,533	466,384	555,214
수입	323,084	425,212	425,513
CDP	834,400	1014,700	1116,400
한국의 대외의존도	82.3	87.9	87.8

■ 한국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미국, G7국가보다 낮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

■ 한국의 FTA 향후 계획

- 기 발효 한·미/한·EU FTA는 양국 간 이행위원회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
- 한중/한일/한중일 FTA 추진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다져나감
- 주요 신흥국 및 자원부국과의 FTA도 지속 추진
- 최근 TPP에 관심 표명하고 참가국들과 예비양자 협의 예정



Chap. III

I 동아시아 지역협력 개요

II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과정

III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미래

Ⅱ.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미래

1

경제통합의 개요



2

경제통합의 장애요인



3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



4

지역통합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5

한중일의 역할



1. 경제통합의 개요

■ 경제통합의 의미

- 시장통합 :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 공동시장 형성
- 경제통합 : 경제동맹, 통화동맹 → 경제통화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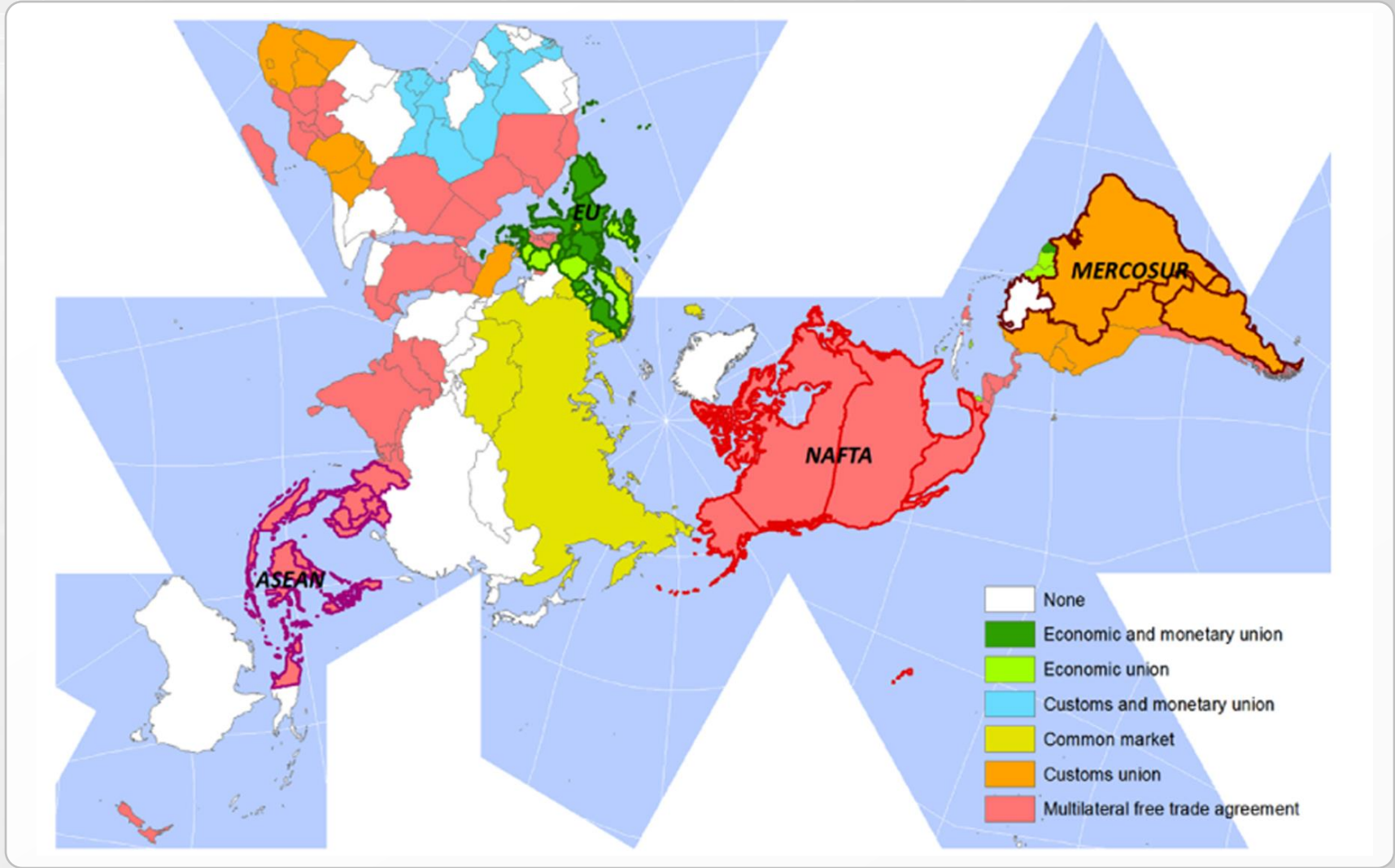
■ 경제통합단계



■ 역외경제통합 현황: 미주의 NAFTA 와 Mercosur, 유럽의 EU, 아시아의 ASEAN 등

- EU는 공동시장단계를 넘어 단일통화, 단일중앙은행(ECB) 발족, 재정안정 협약을 통해 경제동맹(economic union)단계에 도달
-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까지 등장
- 최근 統合 金融監督機構 설립, 統合 預金保障制度 도입 등 금융통합과 統合財政部 설립 등 財政統合 논의 진행 중
 - EU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유럽통합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

<참고> Economic integration Level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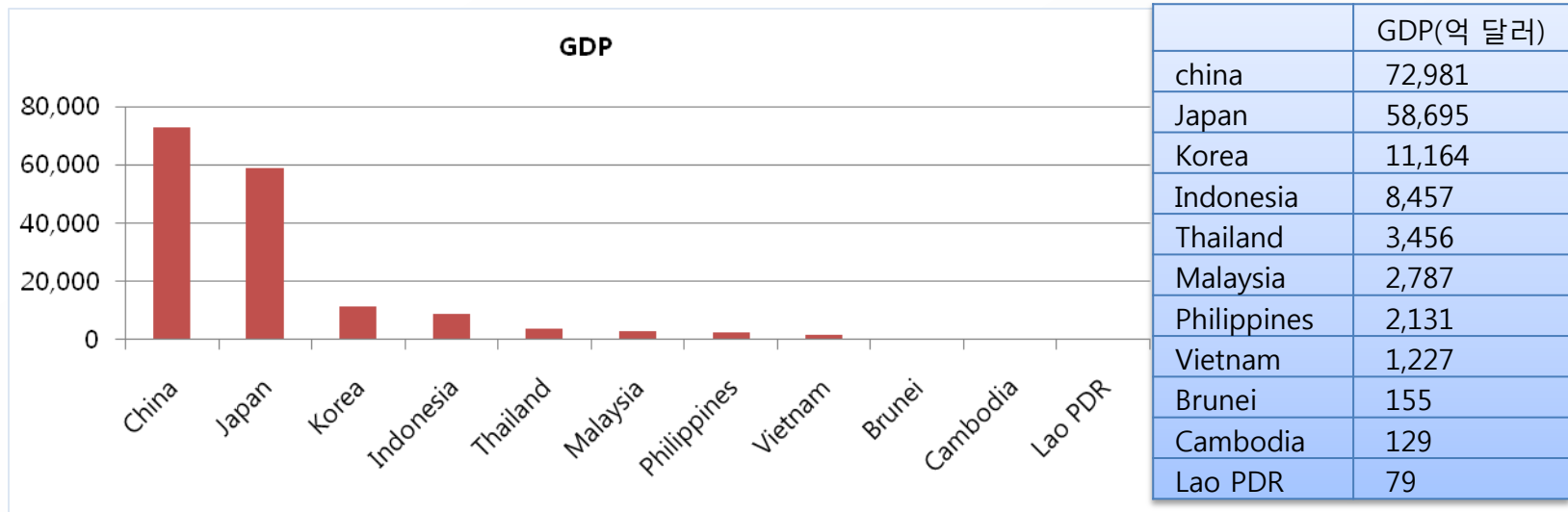
Dr. Jean-Paul Rodrigue, Dept. of Global Studies & Geography ,
Hofstra University, New York, USA.

2. 장애 요인 1)경제력 격차/다기화 되어있는 경제시스템

II.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과정
II-2. 무엇이 장애 요인인가?

■ 경제 규모/발전 단계/소득격차

• 2011년 기준 중국의 GDP는 7조 2,981억불로서 라오스 GDP 79억불의 824배



<자료> GDP - IMF, 한국은행

■ 경제시스템 차이 및 경쟁적 교역 관계

- 한일, ASEAN 'Big 5'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중국 및 일부 'Small ASEAN'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 첨단제품과 부품소재를 수출하는 일본은 역내무역수지 흑자국, 다른 국가는 對 일본 적자국
- 한중일 삼국은 상호보완적 무역관계, 중국은 ASEAN과는 경공업제품에서 수출경쟁국 관계

■ 역내국가간 시장개방, 금융규제 및 자유화 수준의 차이

2) 지역패권주의와 리더십 부족

■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협력 주도권 경쟁

→ 97년 외환위기 직후의 ASEAN+3 지역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최근 많이 약화

■ 역내국가간 정치·외교·안보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 일본의 역사교과서 및 과거사 문제와 한일간 독도분쟁/중일간 댜오이다오 분쟁

✓ 중국의 동북공정 및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 영토갈등(시샤군도西沙群島, 난샤군도南沙群島)

3)구체적 비전과 실천방안 부재

■ 아시아경제협력은 아직 '총론찬성 각론부재(總論贊成 各論不在)상태'

→ 협력원칙,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재

■ 지역 통합을 추진해 나갈 중심기구 부재

❖ ASEAN 사무국의 집행수단과 권한 부재

❖ 'ASEAN +3'도 경제통합 역할을 추진할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제도적 기구 부재

✓ 최근 CMIM, AMRO 등의 발전과 역할이 기대

<참고> 남중국해 해양자원 현황

Ⅰ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 조기해결은 어려울 것

영유권 분쟁지역 자원 매장량

동중국해

- 석유: 10조달러 이상
- 천연가스: 7,400억달러 이상

남중국해

- 석유: 23조달러 이상
- 천연가스: 1,3조달러 이상
- 어업에 따른 경제적 가치: 30억달러
- 現 중국은 원유수송의 77%를 남중국해 루트에 의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망

■ 경제통합 전제조건

-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역내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단일시장 조성
- 동아시아 역내국간 경제발전 단계가 일정수준까지 수렴
- 지역통합에 대한 역내 공감대 확산, 심화

■ 경제통합 방향

- CMIM과 AMRO체계가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아시아통화기금(AMF) 형태의 독립적 지역통화기구 설립 검토 가능
- 향후 역내 무역시장 통합과 각국의 경제여건 수렴도(conversion)가 충족되는 단계에 가야 EU처럼 역내 경제 및 통화통합 목표 구체화 가능
- 통화통합은 우선 안정적 '지역환율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 이후, 아시아중양은행(ACB)설립 과 함께 검토 가능
 - 현재 유로존 사태를 反面教師로 삼아 역내 FTA 확대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 역내 경제수렴도 제고 등 제반 여건을 성숙시키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추진

4. 지역통합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 유럽의 사례

- 유럽연합 : 1952년 유럽석탄철강연맹(ECSC: European Coal & Steel Community) 결성으로부터 50여 년 경과
- 유로탄생 : 1968년 '베르너 보고서'로 부터 30년 , 1989년 '드로르 보고서'로 부터 10년 소요

■ '아시아경제연합'(AU: Asia Union)의 장기로드맵이 마련될 시기 도래

- 2040년까지 무역, 투자, 시장 등 통합
- 2050년까지 통화, 금융, 재정 등 통합 → 경제공동체
이후 정치, 외교분야의 통합 → 大亞細亞 構想(Grand Asia Plan)

■ 통합을 위하여는

- 互惠와 協力, 共生共榮의 분위기 조성 → **제약요인의 대승적 해결**
- 역내국가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경제취약국에 대한 지원 확대
-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된 통합중심기구 설립이 필요

5. 한중일의 역할

- 중국 · 일본 : 리더십 경쟁 중단, 호혜적 관계정립
- 일본 :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 배상
- 중국 : 지역 패권주의적 사고 지향, 지역 내 분쟁 해소

한국이 중·일간,
ASEAN과 한·중·일간
갈등을 조정

동아시아지역
협력, 통합

동아시아 공동번영
및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



EOD

